

KNSI REPORT

컨퍼런스

<제34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천안함사건 1주년 평가와 제언 □

일시: 2011년 3월 23일(수) 18:30~20:0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 사회: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 ▶ 토론: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 주최: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이정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국가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홈페이지(www.knsi.org) 또는 전화(02-733-3348)로 회원 등록 및 후원하실 수 있으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권합니다.

▷**서보혁(사회, 이하 서)**: 코리아연구원은 천안함사건 1주년 즈음하여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포함한 이명박정부의 대북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출판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좌담회를 준비했다. 책 출간 작업에 참여한 6명 중 4명이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오늘 좌담회는 제가 사회를 보고, 김종대 편집장,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이대근 논설위원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다.

공지해 드린 대로 천안함사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첫째, 천안함사건의 의미, 둘째, 이명박정부의 지난 1년 동안 통일·외교·안보·남북관계·동아시아 외교정책 등은 어떠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과제의 순서로 진행하겠다.

천안함사건이 작년 3월 26일에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천안함사건 전후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이 사건은 군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김종대 편집장이 천안함사건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안보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달라.

▷**김종대(이하 김)**: 먼저, 천안함사건으로 46명이 돌아가셨고, 그 고통이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천안함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이라는 특이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천안함사건을 둘러싼 복합적 환경을 봐야한다. 천안함사건이 발생하기 3개월 전인 11월 11일에 ‘대청해전’이라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천안함사건 8개월 뒤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2009년 말부터 2010년 사이에 남북이 3번에 걸쳐서 군사적 충돌을 겪은 것이다. 이 사건들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 사건을 통해서해가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가 되었다.

문제는 분쟁의 양상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 제1·제2연평해전이 수상함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지·해·공 합동전력, 전방위적인 분쟁양상으로의 근원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분쟁의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다. 예전에는 길게는 일주일 전에서 사흘 전에 도발징후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경고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치명적인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치권력이 군을 통제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1년간 서북해역의 모든 군사정세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해라는 좁은 해역에 남북의 치명적 공격무기들이 결집되는 등 안보정세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군사정세에서 국가의 위기관리능력이나 국방정책,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좌표상의 모호함이 가중되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서해에서 총체적 위험지수가 우려수준까지 증가했다.

▷**서**: 천안함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었는데, 천안함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대근 논설위원이 말씀해 달라.

▷**이대근(이하 이)**: 천안함사건 이전과 이후로 남북관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충격파를 주었다. 남북관계 뿐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포괄적인 모순 등을 한꺼번에 드러낸 측면이

있다. 전혀 없는 남북갈등, 군사적 충돌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대립구조, 이 뿐만 아니라 남남갈등도 발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진상조사 이후에 국민적 분열, 국내 정치적 문제까지 포괄돼 나타나는 한반도의 여러 모순들이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남북 충돌이란 면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실패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했고, 정부 발표를 전제로 얘기한다면, 북한이 야기한 공격으로 남북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었다. 그로 인해 남남갈등이 불거지고, 국민 분열 초래되었고, 이명박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사건의 조사결과를 급하게 발표하면서 몇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의 실수와 잘못이 만난, 아주 나쁜 현상들이 천안함사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본다.

▷서: 천안함사건 일어난 후, 남한 정부가 동북아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대응, 미중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박홍서(이하 박): 천안함사건은 중국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역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일 수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남북이 천안함사건을 두고 게임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사건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려면, 미-중 관계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미중 관계는 갈등 구조와 협력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중 관계뿐 만 아니라, 모든 강대국 관계에서 드러난 특성이다.

90년대 후반부터 갈등과 협력 구조가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방점은 협력관계에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천안함사건도 전개되었다고 본다. 갈등구조 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을 통해 미국은 한미동맹을, 중국은 북중동맹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협력구조 측면에서는 천안함사건이 남북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미중 간 합의가 있었고, 이를 협력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갈등과 협력 중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살펴본다면, 사건 직후에는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 아닌,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면서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중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갈등적 맥락에서 미중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남북 분쟁이 심화되는 등의 결정적 위기의 발생은 막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천안함사건 후에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을 때는 극단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중이 협력 구도의 입장에서 분쟁을 막으려 했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한다.

▷서: 여기까지 천안함사건의 성격을 짚어보았다. 다음은 천안함사건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대내적인 측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한반도 평화 자체가 위협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반도가 여전히 분쟁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중심에는 NLL 문제가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정보공개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한이 올라가지 못하게 유엔사령관이 NLL을 그었다는 통념과는 달리, 1961~65년에 유엔사령관이 유엔사 해군 단위가 이 선 이북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밝혀졌다. 남북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그은 선인 NLL이 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불씨가 되어버렸다. 천안함사건과 관련하여, NLL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김: 대청해전과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이 세 사건이 중에서 천안함사건은 매우 특이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자주 떨어져 사고가 잦은 어느 절벽이 있다. 그래서 구조요원을 보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안전장치를 하러 간 그 구조요원만 죽은 것이다. 천안함이 구조요원이고, 백령도가 절벽이라면, 이 사건은 지독한 역설이다. 현 정부 집권 이후, NLL문제를 사이에 두고 남북 대결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고 있었다. 99년 제1연평해전이 끝나고 당시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수중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작년 대청해전 이후에도 북한의 수중도발을 대비해왔다.

그 사이 북한의 해안포는 괄목하게 발전했다. 북한의 해안포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으로 판단되는 백령도를 엄폐물로 삼아 북한의 해안포를 회피할 수 있는 백령도에 찾아간 것이었다. 다시 말해, 수중위협과 육지의 재래식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을 찾아 갔는데, 그 곳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것이 천안함의 역설이다. 너무 역설적이라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 사건 자체가 애시 당초 많은 의혹과 의문,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운명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독한 역설이 일어나는 것은, 천안함사건 이전 1년여 정도 진행된 NLL에서의 남북간 심상치 않은 대치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다.

북한은 대청해전을 기점으로 남측의 NLL전략 및 국지전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최종 확인하고, 남측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전술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군사대치상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이 군사대비태세를 일대혁신 한 것이 2010년 1월경이고, 두 달 뒤 천안함사건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천안함의 역설을 구성하는 군사정세나 안보 대치상황이 남북 정치권과 언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르고 빠른 속도로, 치명적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서 NLL에 관한 대응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군사적 반응으로 연결, 구체화 되었고, 그 이후 대청해전-천안함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NLL문제는 남북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중요한 군사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영역이 됐고, 서해가 과거 경제적이고, 개혁개방의 지역에서 이제는 ‘전략적 요충지’로 남북에 확고히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은 과거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천안함사건의 특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서: 새로운 군사주의가 남북 간 군사적 갈등과 천안함사건을 만든 것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건 이후에 이명박정부의 대외정치나 대북정책의 변화나 정책적 선회가 감지가 되었는지.

▷이: 천안함사건 이후는 ‘사건이 새로운 사건을 낳는’ 연쇄적 성격이 컸고, 그것에 끌려간 측면이 크다고 본다. 말하자면 이 사건이 촉발시킨 대북정책과 강경노선의 대북정책이 만나면서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고, 결국 최악의 남북관계로 치닫게 되었다. 천안함사건이 던진 충격파는 남북관계

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흔적을 남겼다. 큰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겪어왔던 남북 갈등의 결과이자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천안함사건은 말하자면 관계악화의 결과이자 이후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단초라 볼 수 있다. 사건들의 연속- 정부 출범 1년 만인 2009년 1월, 남북 전면 대결태세 진입, 11개월 만에 대청해전이 발생, 이후 2개월 만에 NLL포격사건 발생, 다시 3개월 만에 천안함사건이 터졌고, 8개월 만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못했고, 또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도 없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군사적 충돌로 가는 방향이라는 점. 그리고, 남북 대결 정서가 동쪽에서 서쪽 지역으로(금강산 관광객 총격피살사건, 개성공단 직원억류사건,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등) 옮겨 갔고, 대치지역이 북한 영역에서 남북이 만나는 민감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위험한 남북관계가 지속되었지만, 대북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작은 흐름으로 보면, 대결과 대화의 흐름이 동시에 일어났다. 남북 충돌하는 과정에도 대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천안함사건 이후에도 출구의 필요성이 거론될 때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대결구도로만 치닫지는 않았다. 중간에 대화 흐름-남북 적십자 회담 논의, 북한의 대화제의 등-이 병행되었지만, 대결국면을 뛰어넘을 힘, 대화를 뒷받침 할 만한 힘은 없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축적된 대화도 그를 통한 남북간 신뢰도 없었고, 오히려 지난 정부가 축적해 놓은 것도 무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흐름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서: 대내 정치적으로 살펴보겠다. 천안함사건 이후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5.24 담화문에서 평화단결을 열망하는 듯 한 발언이 있었는데, 천안함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나 야권의 반응에 대해 경직된 대응도 있었고, 국내정치의 혼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측면도 보였다. 이 사건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말씀해 달라.

▷이: 천안함사건 관련, 5.24담화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 이후 정부가 대북지원을 전면적으로 봉쇄, 그 결과로 남북관계는 악화되어갔다. 대북 봉쇄, 선거를 앞둔 천안함사건의 선부른 조사 결과 발표, 이 결과에 대한 신뢰의 결여 등으로 남북 갈등이 벌어졌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5.24 조치의 정당성도 이 때문에 많이 손상되었다. 이로 인한 남북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국내에서 남북대화·협력의 복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억압되는 측면이 있었다. 정부의 조치 자체가 그랬고,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 대응이 정부의 조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남북대화·협력 복원의 정당성은 점차 약화되었고,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과 정당성 약화라는 흐름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연평도 사건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 사건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반응을 언급했는데, 양국의 입장 및 유엔 안보리 회부 후에 보여준 미-중-러-일의 외교전 양상을 정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박: 미중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분쟁 상황을 반대한다. 이 입장은 5월 미중전략대화에서도 드

러났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중은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이는 1월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중의 입장은 한반도에 다시 분쟁이 나서는 안 된다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대전제 위에 있다. 단지 천안함사건이라는 상황 속에서 남북의 입장이 상당히 달라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흐르면서, 앞서 언급한 대전제는 세우면서도,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가 한미동맹이나 북중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는 전략적 사고를 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것이 기본적인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었고, 실제적으로 각 국의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조사 결과를 100% 신뢰한다고 발표하고, 군사행동을 같이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미국은 믿을만한 동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중국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김정일의 방중을 수용하고 북중정상회담을 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항의성 발언에 대해, 이를 내정 문제라며 딱 잘라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중국도 북한의 입장 대변하며, 북한에게 우리야말로 믿을만한 동맹국이라는 메시지 계속해서 던지면서 중국에 잘 보이라는 제스처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미중은 강대국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하고,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각각 비대칭적인 두 약소 동맹국을 두고 합리적 게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성명은 각 이해당사자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이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방식, 조사 결과, 정부의 입장 등을 민주주의, 국내정치, 국방정책의 합리성, 외교적 측면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전히 진실게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논란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정부가 보인 조사 방식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말해봤으면 좋겠다.

▷김: 천안함사건의 조사 방식을 말씀드리면, 국제공동조사단이 동원되어 사건 직후부터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적 조사보다 더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는 5월 15일에 인양되었고, 이 어뢰추진체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결과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개된 조사결과가 국민들과 공유되는 건 고사하고, 조사단 내에서도 소수가 독점하는 정보가 되었다.

국방부가 물리화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조사를 의뢰하여, 민간위원들의 지식을 활용해서 실험적 절차과정에서만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발견된 증거물과 그걸 둘러싼 군사정보인데, 조사단에서 주도적으로 민간위원 토론 통해 구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조사단 밖의 ‘합참’에서 사실상 독점되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단은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내부(정치권력과 군부 간)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 발표 뒤에 국방부가 제시한 잘못된 어뢰 설계도는 청와대를 진노케 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정보 수정을 보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6월로 예정된 장성 정기 진급인사에서 조사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진급이 된 후 청와대에 보고하여 청와대가 더욱더 격분하였다.

그 결과, 진급이 정지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정치권력이 합참 작전본부를 초도화시켰다. 100%진급을 누락시켰고, 반면 합조단 내의 장교들은 장성진급자가 3명이나 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진급하였다. 진급에 불리한 설계도 내용은 빼돌리고 나중에 이실직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6월 말 경에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갈등이 이미 위험 수위였다.

권력 내에서 조차도 신뢰 받지 못하는 내용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말 바꾸기, 조급한 조사 발표 강행 등이 문제였다. 또 다른 여러 실수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민들의 의혹이 빗발쳐도 즉시 대응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편리한 시기를 택해서 수정을 발표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정부가 호통을 쳤던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국민의 의무인 것처럼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다. 어떤 민주 정부도 국민들에게 믿으라, 믿지 말라 강요할 자격은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들을 믿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지, 그 외의 개인적 판단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위험 수위까지 넘어가면서 국민 사이의 갈등을 초래했다.

천안함 관련한 지식과 정보, 진실이 유통되는 상황을 보면, 문민세력과 군부세력 간의 갈등, 정부와 국민의 부적절한 의사소통, 급기야 공안기관까지 동원되어 징벌적 효과를 노린 여론 개입 등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한다.

▷서: 천안함사건 조사과정에서 벌어졌던 관료정치나 조직 간 경쟁의 문제들은 D&D포커스를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조사결과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국내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음양의 압박도 있었다. 조사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 민주적 절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이 사건 조사과정과 내용, 발표 시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의문 속에서 진행되었고, 매끄럽지 못한 면이 많이 발견됐다.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만큼, 정부 발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논란을 잠재워야 했고, 천안함이 가지는 교훈과 정부의 자세를 공유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라던지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일 수 있었으나, 그렇지 되지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위해 발표를 서둘렀고, 불충분한 근거와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되는 것을 연결시켰다. ‘어쨌든 결론은 북한의 소행’ 이라고 발표하다보니 국민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논리적 오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가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찾아내 국제사회인 유엔에 의문점들을 참고용으로 제시했는데, 이런 행위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건이든 100% 밝혀내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없고, 실제로 다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밝혀낸 사실, 밝혀내지 못한 것, 밝혀내지 못한 것의 처리 방향 등을 구별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을 납득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을 뒤섞어놓고 결론만 ‘북한 소행’ 이라고 밝혀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게 했다. 결과 발표 후 여론조사에서 정부 발표 신뢰 여부에 대해 60%만 믿는다고 하고, 4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의혹에 대한 논란과 별도로 그 사건을 북한이 일으켰다는 발표 자체는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어쨌든 절차를 거치고, 불충분한 근거에 의한 것이었지만 북한이 한 행위라고 발표한 것을 반증할만한 자료를 북한도 제시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혹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의혹이 남아있다고 해서 사실이 뒤집어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란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조사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의 인정을 전제하고, 문제제기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서: 천안함 발생 직후 국제조사단이 조사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한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 신뢰성이나 설득력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스웨덴이나 외국 사람이 조사단에 참여한 것이 각 나라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단순히 외국 국적의 사람이 참여했다는 수준에서 국제조사단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중국은 참여할 수 없었고,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박: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 과학을 팩트(fact) 그 자체로 보는 시각과, 과학의 사회학(과학과 권력의 연관성 강조)으로 보는 시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천안함사건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과학의 사회학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 과학 그 자체로 보자면, 객관적이고, 반복 가능한 실험에 의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실험에 의해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당사자-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포함 된 6자회담 구도-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천안함사건 조사를 과학적 접근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은 배제되었고,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개별조사를 했지만, 러시아 조사결과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발표된 천안함 사태의 진상조사와 북한 소행이라는 결과가 얼마나 신빙성 갖겠는가? 이는 이미 과학을 벗어난, 과학의 사회학적 접근에서 이루어진 조사였다는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은근히 정치적 억압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서: 『천안함 외교의 침몰』 책의 부록 ‘천안함사건 및 공식입장 발표 일지를 보면 6월 4일 천안함사건의 안보리 회부 이후, 26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사건에 대한 입장을 미국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8일에는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는 발표를 하였다.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것이 중국을 포위하거나 경계하는 외교적 행위 및 합동군사훈련을 공공연히 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지만, 천안함사건 이후 동북아 외교 정세는 의도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갔다.

▷박: 동북아에서 미중의 관계를 보았을 때, 통제가 안 될 수는 없다. 미중은 담합구조를 이루고

있고, 협조체제의 방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협조라는 것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책임 분담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중국은 경제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다. 각각의 필요에 의한 미중 협조체제 속에서 동맹국 때문에 미중이 싸우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의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사건을 교묘히 이용하여 각각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중 간 안정적 협조체제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게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확대되어 ‘남북 간 충돌→미중의 연루→미중 간 분쟁’으로 발전 되는 상황은 절대로 미국과 중국이 경계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서: 남북관계나 동북아 내 미중관계 차원에서는,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증가하여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게 한 사건이 천안함사건이었으며, 지켜보는 이들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논의의 중심을 이명박정부의 정책으로 돌려보겠다. 천안함사건 이후의 안보·국방 정책, 무기체계, 연평도 일대의 방어 태세, 국방비의 편성 문제 등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김: 우선 희망적 조짐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 남북이 모두 확전을 원치 않음이 역설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NLL대비계획에 따르면, 속초함이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NLL 이북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NLL경계를 넘어가지 않았고, NLL 이북 지역에 표적 있었을 때는 사격을 중지했다는 사실이다. 연평도 사건 당시에는 F15전투기가 출격 했지만, 공중지원에 참여 안했고, 북한에서는 미그기가 출격했지만, 포격전에서는 교전에 참여 안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연평도 사건 당시 교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의 첫 메시지가 확전 방지였다는 사실도 그렇다.

이를 통해, 우발적이고 국지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어쨌든 전면전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서북해역의 충돌위험을 잘 관리한다면, 국가 위기관리 정책으로 승화시켜 더 큰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만한 여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정책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가 쿠바 해안을 군사적으로 봉쇄 했지만, 막후 협상을 통해 터키에서 미국의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흐루시초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위기를 잘 벗어났다. 상대방이 벼랑 끝에 있을 때 완만한 경사로로 안내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관리를 서북해역에서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기관리와는 정반대인 군사 안보주의로 경도되고 있다.

이는 국방비 증액, 치명적 정밀 무기의 서북도서 배치, 적극적 억제전략 수행 위해 무인정찰기, 스텔스기 배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북해역은 아무리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를 증액하고 무기를 배치하더라도, 우리의 군사력으로 전부 다 방어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남한은 작은 섬 5개로 이루어져 있고, 북한은 광활한 육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전략적으로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군사력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군사적 방어뿐만 아니라, 후방지원전력까지 고려했을 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원천적 군사적 불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위기를 통제·관리하여 확전을 차단하는 장치, 이를 관리하는 기술 등이 매우 중요한데, 대통령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무능함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교전규칙이 문제라며 바꾸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서북도서에 세계 최고 무기를 갖다놓겠다고 했는데, 둘 곳이 없다. 또 금문도와 같은 요새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망상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F15 전투기 출격과 관련해서는 자위권에 포함되는 것인지,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군 수뇌부도 논쟁을 하다가 샤프 사령관이 서한으로 한국군 자위권이라고 확인해줌으로써 논란이 사그라졌던 경험도 있었다.

이 정부는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이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위기관리는 계속 방치하면서, 군사적인 무기만 증강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북해역은 군사적으로 절대 불리한 지역인데 이러한 무기 증강이 계속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평양으로 가는 전략적 관문인 해주와 남포에 직접적인 위협이라 판단할 것이고, 북한의 장사정포, 공기 부양정, 인간어뢰부대 등의 군사력을 서해에 밀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군사적 위기의 고조는 남북 간 새로운 양상의 군비경쟁이라 할 수 있으며,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유사한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의 첨단무기 증강의 배경을 보면, 서북도서 방어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 도입만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전개념을 만들고 방어의 기본원칙을 수립한 후, 이에 맞는 전력을 투입하는 것이 병가의 상식인데, 무기 도입만 앞세워 놓고, 아직 작전계획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북해역 방어사령부 만든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무기 도입이 결정된 와중에 지휘체계, 작전계획도 못 만든 상황인 것이다.

이런 하드웨어 전력의 증강으로 평화를 도모해보겠다는 ‘군사주의’ 적 위기관리 방식으로는 새로운 위기 발생 시 정부가 어떻게 정세를 주도, 통제하면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천안함 사건이 1년이나 지난 지금, 아직도 발전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서: 이러한 군사주의적 대응 방식이 대북 압박정책과 북한의 붕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는가?

▷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의 발생 계기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변화시키겠다는 구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도 또 다른 압박과 제재 외에는 선택이 없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대화를 통해 대북지원을 하고 협력을 통해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지원 등의 협력을 끊고, 북한이 고통을 받게 해서 북한이 남한에 지원을 바라면 ‘도와준다’는 구상이었는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정부의 구상은 완전히 어긋났음이 확인됐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기존의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는 이명박정부에서는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또한, 이명박정부에서 확인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라는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지난 8.15기념사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념사에서는 ‘평화적 관리를 넘어서 통일준비를 향해 나가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제재와 압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조

차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해석되고, 북한이 곧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체제라는 인식에서 그러한 체제와 대화나 협력하는 헛된 노력 대신 붕괴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흡수통일론이 부상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의 담론이 북한붕괴로 급격히 선회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대북강경책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천안함사건의 결과로 북한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는 북한과 더 이상의 협력과 교류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대비하거나 북한 붕괴에 대한 준비 수준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를 한정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부는 ‘평화통일’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남은 2년 동안의 남북대화가 실패하더라도, 정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 등을 자신의 대북정책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 같다.

▷서: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견지한 것이 성과이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명박정부가 지난 1년간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하지 않았던 것이 이명박정부 스스로 설정한 규범, 소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개선에 소홀했던 것이라 본다면, 정부의 ‘실용주의’ 와도 어긋나는 것인데.

▷이: 이명박정부의 모순이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도 대북정책의 성격조차 못 밝힐 정도로 어중간한 상태이다. ‘대북실용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꽤 복잡한데, 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유연성은 사라지고, 남은 건 ‘원칙’ 밖에 없으며, 대북정책의 균형은 무너졌다. 정부가 내세우는 상생·공영의 몇 가지 하위원칙(북한의 변화, 실질적 대북 지원,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제협력)들이 ‘실용적’인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대북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비전과 구체적 정책 목표를 본다면 스스로 실패한 것이고,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원칙과 경직된 대북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었다.

정부가 스스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남북관계에서 특수성 고려하고, 원칙과 균형이 조화 이루는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는데, 상생과 공영은 사라지고, 원칙과 남북관계의 국제화 등 편향된 대북정책의 수단들만 남았다.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목표는 이루지도 못했고,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어 수단이 목표가 됐다. 자꾸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데, 목표는 없고,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상생과 공영의 실패는 뒤로 한 채, 수단만 남은 모습이다.

▷서: 천안함사건 이후를 보면, 동북아 4강외교, 냉전시대의 남북관계가 아주 경직되어 있을 당시의 동맹외교로의 회귀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주변국들과의 균형외교나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외교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원인은 무엇인가?

▷박: 실용외교라는 개념부터 풀어내야 한다. 이명박정부에 와서, 일반적으로 한중관계가 경색되었다고 말하는데, 결국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정부가 실용외교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관념외교·이념외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실용외교의 핵심은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좋으면 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실용외교이다. 정부의 말대로 실용외교를 했다면, 남북관계는 좋아지고, 이전 정부보다 한중관계는 더 발전된 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한다. 이것이 실용외교이

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실용외교를 외쳤지만, 한중관계는 상당히 경색되었고,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북한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등,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등의 일반적인 외교관계에서는 하기 힘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과 공동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이에 대해 주권국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존심외교이지 실용외교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중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를 거꾸로 된 실용외교라고 부른다.

반면, 한미관계가 좋아졌는지를 본다면,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보면, 미국이 이명박정부의 태도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중은 협조체제를 통해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역시 대북관계를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한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미국도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친미노선 강화에 따른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정부의 외교가 미국의 대외정책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용외교를 주장한 이명박정부는 대북관계와 남북관계, 한중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한미관계도 유연하게 풀어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용외교와 이념외교를 혼동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 국제정치는 원래 원칙이나 이념보다는 국가 간의 국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의 대북조치로 발표한 것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다. 지난해 6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와 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는데, 게이츠 장관이 이를 못 보내겠다고 했고, 국방부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6월 7일 전작권 관련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공모함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의제에 포함시켜, 결국 항공모함이 7월부터 들어오기로 했었다.

그러나 G20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이 계속 연기되었는데, 이는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에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었고,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까지 했다.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이 취소된다. 이 실랑이가 10.19일까지 계속되는데, 미국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며, 10월 20일에 항공모함 보낸다고 했는데 김태영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항공모함의 입항을 막았고, 11월 12일 G20 정상회담이 무사히 끝났다. 사실상, 연평도 사건이 터져서 항공모함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G20 이후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연평도 때문에 한 것처럼 되었다. 이 시기 외교정책의 변화는 G20회의가 더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50개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회의이고, 각 국의 정상은 인천 영종도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될 텐데, 북한의 GPS 교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외국 정상들이 경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째째한 공항에 회의 때문에 오려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중요 이익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재빨리 남북관계나 한중관계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정국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올해 남북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된 배경도, 내년 상반기를 안정적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정권의 바람에서 남북대화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

현 정부의, MB식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원칙을 강조하면서, 보수세력과 여론 관리에 충실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구조는 남북관계의 긴장을 장기간 견디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남북의 긴장 관계 속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사회·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부는 대화를 추진하면서, 천안함사건의 출구전략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현 정부가 득실을 파악하면서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서: 북핵문제를 빠뜨렸다. 이명박정부의 첫 번째 대북정책이 비핵개방 3000이었다. 이는 북핵 문제의 우선 해결을 대북정책의 제1목표로 둔 것인데, 천안함사건 터지면서 이후 대북정책은 대북제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관리도 실종되어 버렸다.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로 부각시킨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을 더 많이 변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가 핵 문제이다. 과거는 핵 문제를 관리하려고만 하고, 사실상 방치했는데, 우리는 핵 문제를 최우선을 두고,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비핵개방 3000에서는 현실적 구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북한이 스스로 폐기하라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었던 것이다.

북한과 대화의 방법이든, 압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내든, ‘핵 폐기’ 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상을 갖고 핵 폐기의 길로 유인할 방법은 없고, 폐기 이후의 유인책으로 폐기시키겠다는 안일하고, 비현실적인 구상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북핵문제의 해결을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그 결과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이었고, 핵 개발 능력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고, 수단이나 방법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핵문제는 남북관계와도 연계되어 있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가능성이 남북문제 때문에 더욱 미뤄지는 측면도 있다.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6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연계시켜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는 6자회담이 진전되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6자회담을 남북관계를 조건으로 걸었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이 되고, 복잡하게 얽혀있음으로써 남북도 진전이 안 되고, 6자회담도 진전되지 못하게 해놓은 속수무책의 상태이다. 현재는, 남북관계도 최악이고, 6자회담도 북의 핵실험 이후 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해 의견 합의를 못 이루는 절망적인 상태인데, 남은 기간 동안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현실적 해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부는 남은 2년 동안 새로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현상유지 및 관리하고자 할 것이고,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더 악화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다음 정권에 넘겨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4강외교는 어떻게 전개돼야 할 것인지.

▷박: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협조체제에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이

명박정부가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미중관계를 갈등관계로 오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중관계는 기본적으로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익 균형에 방점을 찍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 이를 통해 한반도를 안정적인 구도로 관리하고 싶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이다. 남북관계는 현 정부 들어서 치킨게임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치킨게임이 형성되려면 비슷한 두 행위자가 대립해야 하는 것인데, 남북은 너무 비대칭적이고, 다르게 생각하면 대인배게임이 되어야 한다. 대인배게임에서는 먼저 차를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치킨게임과 게임 구조는 같다. 그렇다면, 남한이 선제적으로 포용정책 취하는 것이, 남한이 대인배가 되는 게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변화가 없다고, 우리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꼴이다. 이 게임은 아무런 진전을 생각하기 힘들다. 치킨게임의 또 다른 형태는 아큐게임인데, 예를 들어, 북한이 남한에 굶히고 들어오면서도 정신적으로 승리했다는 정신승리법을 말한다. 결국 요지는 남한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 게임 구조를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서: 천안함사건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의 과제는 ‘평화’ 인 것 같다. NLL일대의 남북 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당면 과제와 장기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김: 서북해역의 긴장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이 감수하는 기회비용의 손실도 클 것이라고 본다. 내년의 G50이나, 분쟁지역 관내에서 개최되는 3년 후의 인천 아시안게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치명적 요인이다. 한국은 90년대부터 서해안 시대를 표방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안정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국가 성장과 발전의 비전이었다.

이에 따라 서해 공항, 항만의 건설, 중국 관광객 특수를 누리면서 경제 영토를 넓혀왔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서해가 분쟁의 바다가 되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전략이 붕괴됨을 뜻하고, 앞으로의 국제행사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경제 손실만 보더라도, 발전전략은 불가능해진다.

백령도의 경우, 예년 같으면 낚시꾼으로 발 디딜 틈 없었을 텐데, 지금은 유령의 섬이 되어버렸다. 어업기로서 서북해역의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영토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간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언론을 통해 백령도 앞 철갑상어 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는 김 위원장이 자랑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어려울 것이다. 어차피 통일되면 없어질 허구적 경계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손실이 얼마나 큰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불편과 손실이 이 정도이지만, 이것이 축적되었을 때에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NLL문제는 법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전협정상의 지위, 법적 문제로 접근되어 왔는데, 그 문제는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남과 북이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크다는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10.4선언도 서해경제의 부흥을 위한 합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10.4공동선언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재원 소요라는 점에서 단

점을 갖고 있으나, 눈높이를 낮추고 공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서북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이익을 남과 북이 공유하고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협력안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러 비전을 제시한다면, 김정일 위원장도 체면을 세워가며 우리 측에 양보할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 단절되었던 것을 이어받아 실용적인 수준의 중간적 단계에서 ‘新서해평화구상’으로 연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서북지역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안보문제이다. 일단 서북도서에서 사는 주민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현장에서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공격무기나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섬 자체의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전력을 보장하면서, 유사시 후방의 지해공 합동전력이 도와준다는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주민들이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정책은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 간 이익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10.4 선언보다 낮은 수준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북한에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

▷서: 현 정부의 잔여임기 동안에 대북 관계개선에 기대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내적 합의는 무엇이 가능할 수 있을지, 또한 이명박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제시해 달라.

▷이: 이명박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에도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에도 그 부분을 과시하려 할 것이고, 대북 강경책의 구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보수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년 집권 내내 남북관계의 악화,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물러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측근들과 대통령 스스로도 원칙은 지키되 남북관계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된다. 비록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지만 남북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상호 무력도발을 억제한 것은 완전한 대결상태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남북 모두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긴장은 계속되었지만 그 이상은 남북이 모두 부담스러워 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칙에 집착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북한이 바뀌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어쨌든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서: 한미동맹을 고려하면서, 동북아시아 평화 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동북아외교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세력권이 겹치는 지정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통일한국이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상대 강대국의 영향에 놓여 자

신들에게 겨워지는 단검이 될 것이 두려움이다. 그렇게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세력공백을 만들면 안 된다.

한반도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이, 미국은 중국이 세력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우려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이 최소한 자위권 정도의 군사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적 단계로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한 것이다. 남북이 지금과 같은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관없지만, 이는 한반도 민중들에게는 끊임없는 긴장과 분쟁에 대한 우려, 공포로부터의 불안 등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안보는 증가하겠지만, 인간안보는 쇠퇴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과 남한정권 모두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인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 천안함사건은 정전체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2, 제3의 천안함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군사적 방법이나 압박, 또는 특정국가와 손잡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차원의 외교·안보·국방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구성원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간 이명박정부가 전개해 온 천안함 외교는 침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오늘 남북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각도에서 살펴봤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남북의 공동이익이나 한반도 평화, 동북아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외교분야에서 동맹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북아 전체를 보는 균형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안보분야에서는 남북 간 정치적 신뢰를 발전시키는 바탕 아래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등이 남북 간 가동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강조하고 싶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에서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나리오 속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인데, 남북의 통일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되었거나, 평화체제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큰 전망에서 본다면 통일 지향적인 평화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통일 지향적 평화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하여 남북의 지도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우리 국민과 여론이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평화를 지킬 때 남북간의 공영과 경제발전 이 있을 수 있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코리아연구원과 경향신문이 주최한 천안함사건 1주년 기념 통일·외교·안보 정책관련 좌담회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